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1	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	분야	재정, 경제, 복지
□ 목 표 ○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불평등 해소와 사회경제 전환 ○ 전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전국화 □ 이행 방법 ○ 청년기본소득 -청년기본소득조례 제정으로 만 19~29세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 -소득과 자산,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○ 노인기본소득 -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대에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 -소득과 자산,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-기초연금, 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○ 농어민수당 -농어업공익수당조례 제정해 월 10만원 농어민수당 지급 -지자체별로 기 시행중인 유사 제도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가 가구 단위가 아니라 농어민 1인당 지급 ○ 아동·청소년 기본소득 -현재 만 0~8세에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·청소년기본소득으로 확대 개편			

☐ 이행 기간

- 2022년 준비 기간 거쳐 2023년부터 시행

☐ 재원조달방안 등

- 청년기본소득·노인기본소득·농어민수당

- 광역-기초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씩 부담
- 지자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70%를 임기내 예산으로 배분 사용
-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의 상당액을 예산에서 활용
-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총예산액 대비 5~10% 내외 지출구조조정 등

- 아동·청소년기본소득

- 국고보조사업(중앙정부-지자체 부담) 편성에 의한 현행 재정 분담을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복지사업으로 전환
- 전국 지자체의 협력 네트워크 통해 공론화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2	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대	분야	재정, 경제, 복지
□ 목 표 ○ 잔여적 복지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로 전환 ○ 디지털 격차 확대,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춘 복지 및 공공서비스 제공 □ 이행 방법 ○ 이동통신 최소 5GB 데이터 기본권 보장 -주요 주민들이 모이는 주요 거점에 무상 와이파이 확대 -궁극적으로 「전기통신사업자법」의 위임행정규칙 ‘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’을 개정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적정 비용 할당 ○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보장 -정부 시범사업 ‘지역사회 통합 돌봄(커뮤니티 케어)’에 지역별 ‘디지털 정보케어’ 항목 신설 -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실시 ○장애인 권리 보장 -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, 자립 정착 지원 -기초지자체별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와 비용 최소화 -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강화 및 문제점 보완 -장애인콜택시 확대와 사용 편의 개선 -202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100% 완료,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장비 도입 -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<별표2.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>에서 ‘7.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삭제’ ---> 장애인 지역평생교육센터 접근권 향상 * 「장애인평생교육법」 제정			

○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 복지 제고

- 창작활동에 대한 다양한 창작수당 도입, 보편적 문화예술 활동 고무
- 「문화예술인 지원 조례」 제정으로 산재와 고용보험 지원, 지자체 공공부문 발주 지원 등 시행
- 지자체별 일정 규모 이상 '시민예술센터' 설치해 공연+전시+상영+작업+교육 공간으로 활용, 그 운영은 문화예술정책 전문가, 지역예술인, 시민, 학생 등으로 구성한 '시민문화네트워크'가 담당토록 함
- 주요 지자체별 '음반과 영상물' 전문 미디어도서관 설치, 기존 도서관은 음반과 영상물도 함께 구비하도록 확장

○ 누구나 접근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

-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,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을 필요한 누구라도 입소 가능하도록 개방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노력

□ 이행 기간

- 2022년 준비 기간 거쳐 2023년부터 시행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3	모두가 돌보는 사회	분 야	재정, 경제, 복지
□ 목 표 ○ 맞춤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○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 상황에 맞는 돌봄 사회서비스 개혁 □ 이행 방법 ○ 「생활동반자지원조례」 제정 -혼인과 혈연 중심 가족 개념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의 자발적 결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례 제정 -1인 가구 포함한 생활동반자 가구에 대한 지자체 종합지원계획 수립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복지 지원 -국가적 차원의 「생활동반자법」 제정 촉구 ○ 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즉각 폐지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요건을 2023년부터 즉각 폐지 촉구 ○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및 재공공화 - 「통합돌봄조례」 제정으로 민간위탁 등으로 민영화된 돌봄서비스를 재공공화 -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아이돌봄서비스,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공공서비스로 제공 -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직영 운영 ○ 아동수당의 아동·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 개편 -만 0~8세 제공 아동수당을 유럽연합 다수 소속 국가들처럼 만 18세(고등학교 졸업 연령)까지 확대			

○사회서비스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

- 종합재가센터 확충시 요양보호사,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규고용 비중을 50%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고용시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
- 사회서비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이상 급여 제공

○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도 연차유급휴가 감소 불이익 제거

- 「근로기준법」개정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이용하는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삭감당하는 불이익 제거
- 임신기·태아건강검진·수유시간 근로시간단축에서도 연차유급휴가 감소 없도록 함

☐ 이행 기간

○ 재임기간 중

☐ 재원조달방안 등

○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4	성평등 사회	분 야	재정, 경제, 복지
□ 목 표 ○ 직장·돌봄·성애·재생산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 및 소수자 차별의 철폐 ○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□ 이행 방법 ○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-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: 지자체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지역사회 사기업 부문으로 확산 유도 -여성 관리직 및 임원 여성 비중 확대: 지역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직 및 임원 30% 할당제 의무화, 300인 이상 사기업 부문 확산 유도 -광역지자체 차원 민관 합동 성별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 ○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-모든 여성 대상 월경용품을 바우처 방식으로 무상 제공 -공공부문 생리휴가 도입 및 유급화 -공공산후조리원 확대 -지방의료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-병의원과 보건소/보건지소에서도 임신중지 유도약물 처방과 진료 가능토록 함, 임신중단 의료비 급여화 및 건강보험 적용 관계법령 개정 촉구 ○ 소수자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 -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젠더건강증진센터 신설하고 여성과 성소수자의 의료 진료 및 상담과 익명 무료 검사 등 실시 ○ 성평등한 돌봄 -공공부문부터 아빠 육아휴직 사용 권장하고 인사고과에 반영 -공공조달에서 아빠 육아휴직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-임기내 공공부문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30% 달성			

○ 공공부문 권력형 성범죄 근절

-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자체 인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단체장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별도로 구성

-업무상 위계·위력 간음죄 적용범위를 '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'로 확대(법률 개정 사항) 촉구

-비동의 간음·추행죄 도입(법률 개정 사항) 촉구

□ 이행 기간

○ 재임 기간 중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○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5	주거권 확보와 부동산 이익의 사회적 공유	분야	재정, 경제, 복지
☐ 목 표 ○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 보장 ○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 시스템 마련 ☐ 이행 방법 ○ 청년 및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-이자율 1.5% 수준 5,000만원 이하 소액 월세보증금대출 확대 -‘행복기숙사’ 중심 대학 기숙사 수용률 35% 확대 -소형 공공임대주택에 범죄예방환경설계(CPTED) 의무화 ○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환경 개선 -기존주택 매입임대·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5% 이하 공급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공급물량을 2024년 15%, 2026년 25%로 확대 -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하고, 매입 리모델링 사회주택 시행 -「주거기본법」의 유도주거기준을 최저주거기준으로 전환해 인간다운 삶의 기준으로 주택의 최저수준을 상향 ○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-공공주택개발의 기본틀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거용 건물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가져감 -SH공사의 토지임대부 모델을 참고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50만호 이상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			

○ 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 확대

-2025년까지 50만호 이상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목표, 토지임대부 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함

-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을 영구임대주택 기준으로 변경해 입주자가 공급비용의 15%에 대해서만 임대료 부담토록 함

○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원의 지역 기본소득화

-초과이익의 50%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반대

-도시정비사업에 사용토록 한 환수교부금 50%를 지역 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 촉구

○ 토지세 기반 기본소득

-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는 토지세 신설하고 토지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

-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 발의 「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」의 토지세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2023년 국민 1인당 월 6만원 토지배당 가능

-무주택 서민은 토지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따른 임대료 인하 효과, 토지배당에 의한 임대료 지원이라는 이중의 혜택, 전체 가구의 88%가 순수혜 가구가 됨

□ 이행 기간

○ 재임 기간 중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○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6	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사회 전환	분 야	보건의료, 환경
□ 목 표 ○ 전국적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 위기 극복 ○ 생태사회 전환을 위한 지역 성공모델 수립 □ 이행 방법 ○ 지역 녹색은행 설립과 녹색금융 -중앙정부-광역 지자체-민간의 자본금으로 지역내 재투자 전문 녹색은행 설립 -녹색은행은 녹색금융 전문 은행 역할 *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, 탄소포집, 전력저장장치(ESS), V2G(Vehicle to Grid) 전력망 등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*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담보대출 시행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치를 금리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등 녹색금융 시행 ○ 10개 도시 탄소중립 시범사업 -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10개 선정해 탄소중립 시범사업 진행, 중앙정부와 사업계획 및 자원 협력 -제로에너지빌딩, 친환경차 100% 보급, 주택과 건물 태양광 보급 등 전면적 탄소중립 사업 시행 ○ 지역내 전력망에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(Smart-Micro Grid) 기술 적용 -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전력 사용의 효율화 추진 ○ 탄소중립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-「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」 제정 -태양광 등 에너지협동조합, 전기자동차 Car-Sharing 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			

○ 탄소세 기본소득

-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탄소세 부과하고 세수는 국민 1인당 균등하게 배당(탄소배당)

□ 이행 기간

○ 재임 기간 중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○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7	생태 사회 전환	분 야	보건의료, 환경
□ 목 표 ○ 경제성장 지상주의 폐지하고 생태사회 전환 ○ 인권 개념을 자연과 동물의 권리로 연장하는 문명의 전환 □ 이행 방법 ○ 지역 중심 생태 참여수당 활성화 -지역의 주요 자연보호지역 또는 지역기반보전수단(OECMs) 발굴하고 이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 참여수당 지급 -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○ 자연 휴식년제 등 자연 회복력 강화 활성화 -농어민수당, 생태 참여수당과 연계해 어장휴식제(일명 바다휴식년제), 자연 휴식년제를 활성화 ○ 대규모 어획, 남획 및 어구 쓰레기 규제 촉구 -대규모 어획, 남획을 지원하는 유해한 수산 보조금의 폐지 촉구 ○ 플라스틱 규제 정책 실시 -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규격화로 수거 및 재활용 효율화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-일회용 플라스틱 2030년까지 50% 감축 국가적 목표 시행 협력과 촉구 ○ 공장식 축산 점진적 폐지 지역 모델 사례 발굴과 확산 노력 -개식용 금지와 사육 및 유통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 강화 -지역 축산업자, 축산 노동자, 생활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공장식 축산을 대체하는 생태친화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 확산			

○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거래의 금지

- 야생동물 보호구역 확대 및 생태통로 확대
- 도시개발에 야생동물 보호 반영하고 야생동물 고려한 도시재생계획 실시
-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지자체 차원 감독 확대강화

○ 반려동물 산업 축소와 규제

- 반려동물의 거래를 원칙적 금지 기조에 맞춰 입양문화 확산 노력
- 동물실험 규제 강화, 동물신체 이용 산업 축소 방안 마련 등

○ 탈핵 정책

-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탈핵 로드맵 수립 촉구
- 활성단층에 건설된 12개 핵발전소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가동 핵발전소 안전체계 구축

☐ 이행 기간

○ 재임 기간 중

☐ 재원조달방안 등

○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8	디지털 전환기 노동권 보장 혁신	분 야	교육, 인적자원
□ 목 표 ○ 디지털 전환기 노동권 사각지대의 해소 ○ 취약 노동자 노동권 보호 강화 ○ 기본소득 연계 노동시간 단축과 생태 전환의 연계 □ 이행 방법 ○ 현장 밀착형 노동권 강화 -기초지자체(시군구)에 전담 노무사 배치 '노동 상담소' 설치, 노조 설립 지원 및 노동 관련 노동자, 노동조합, 기업의 민원 상담 전담 처리 -시민근로감독관 제도 도입(근로기준법 개정) 촉구: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시민근로감독관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감독권과 동등한 권한 부여 -부동산 등기에 있는 '확정일자' 제도처럼 <근로계약 확정일자> 제도 도입 -「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조례」 제정으로 지방 기업체 사용자에게 노동권 교육 이수 의무화 -체불임금 근로감독 강화, 지자체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활성화 ○ 노동조합-지자체-기업 사이 플랫폼 노동자 권리 선언 -지역의 노동조합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존중과 노동조건 향상을 공동 선언하고, 참여 기업에게는 지자체 인증 마크 수여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 -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「플랫폼 노동자 권리법」 제정 촉구 ○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조달 인센티브 부여 -1일 8시간 기준 주 4일만 일하는 '주 3일 휴식' 사회 지향 -실질임금의 감소 없거나 최소화한 기업에 대해 지자체 우수기업 포상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			

○ 5인 미만 사업장 현장 조사 실시

-지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하고 노동법 위반에 대해 근로자의 시정 요구, 고발 등을 지원

-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「근로기준법」 개정 촉구

○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 폐지 교육 정상화 노력

-저임금 고위험 노동자 제공 제도로 변질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 폐지하고 3학년 2학기까지 교육 과정을 정상 진행

○ 직장갑질 근절

-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없이 「직장갑질금지법」 전면적용 법 개정 촉구

-‘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’에 대한 징계 금지제’ 도입 「근로기준법」 개정 촉구(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상태)

□ 이행 기간

○ 재임 기간 중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○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9	디지털 전환 가속 및 혁신 이익의 공유	분 야	과학기술, 정보통신
□ 목 표 ○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되는 디지털 전환 ○ 데이터, 디지털 시민 주권의 강화 □ 이행 방법 ○ 「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조례」 제정 -공공부문 디지털 데이터와 ICT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공공의 통제, 이익의 공공화 원칙 기재 -행정시스템, 스마트시티사업, 민관협력 ICT 사업 등에서 개방형 표준과 무료 소프트웨어 우선,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우선 지원 원칙 -조달행정에 디지털 기술 주권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 주권 조항 도입 -공공이 배당권을 갖는 공유지분형 벤처 스타트업 육성 사업,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 데이터 생성 활성화 지원 등의 근거 규정 마련 ○ 공유지분형 벤처 스타트업 육성 -시민이 기업에 대해 배당지분권을 갖는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 -인공지능, 블록체인, 빅데이터 분석, 공간정보, IoT 등 ICT 기술 분야에서 지자체가 50% 이상 지분을 갖는 스타트업 육성 시범사업을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○협동조합 운영 공공배달앱 모범사례 발굴 -가맹점과 배달 노동자로 조직된 협동조합 운영 공공배달앱 사업 발굴해 경쟁력을 갖추기 때까지 기술적, 행정적 지원 -배달앱 분야 성공 모델 기반으로 택시, 청소, 창작 등 여러 분야로 모델 확산			

○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촉진

- 「디지털 전환과 이익 공유를 위한 뉴딜기금법」 제정해 중앙정부-지자체-민간 합동 디지털뉴딜펀드 조성으로 공유지분형 디지털 테크기업에 투자

-메타버스, 디지털트윈, 비대면 기술 인프라구축, 사물인터넷, 블록체인 등의 t신생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

-수익은 초기에 디지털뉴딜펀드 규모 확대에 사용하고 일정기간 이후 공유부기본소득 배당

○ 기본소득 데이터세 도입 촉구

-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빅데이터에 대해 빅데이터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

○ 플랫폼 횡포 방지

-‘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제’ 도입해 독점 플랫폼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수료의 일방적 인상, 조회 횟수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

-온라인 플랫폼의 입주업체 보호 의무 강화하는 「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」 개정 촉구

□ 이행 기간

○ 재임 기간 중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○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

선거명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		
정당명	기본소득당		
정책순위: 10	정치 독과점 해체와 다원성 보장	분 야	정치, 행정, 사법
□ 목 표 ○ 거대정당 독과점 정치체제 해체와 정치적 다원성 확보 ○ 비례민주주의 구현 선거제도 개혁 □ 이행 방법 ○ 민주주의 기본소득 실시 -모든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정치인,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1만원의 정치기본소득 지급,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직선거당 1만원씩 추가 지급 -민주주의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정치 참여에서 불평등을 양산하는 정치기부금 세액공제제도는 폐지 ○ 평등선거제도 도입 ● 국회의원 선거: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-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:1로 하여 표의 등가성 확보 -의석 할당에서 3% 봉쇄조항 없애고 <1/의석총수%>를 득표하면 1석부터 확보하도록 함 ● 지방선거 -광역의회는 모든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(전면 비례대표제) -기초의회는 3~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전체 의석의 10%인 비례의석 비율을 30%로 확대 -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● 대통령선거 -결선투표제 도입			

○ 정당정치 다양성 보장

-이중당적 허용 등 선거법 개정으로 공직선거에 2개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연합을 구성하여 단일 정당으로 선거 참여하는 선거정당연합 허용

-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담-토론회에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등 개정

○ 평등한 참정권

-만 18세 미만 청소년 정당가입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 폐지

-선거운동시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특혜 폐지

-교사·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정치적 자유 확대

-시각장애인·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하는 제도 개혁

-공직선거일의 유급휴일화로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들의 투표권 보장

○ 주민자치의 확대·강화

-주민투표 등 각종 직접민주주의 요건 완화와 실효성 강화

-주민 제안이 조례 제정·개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설립

-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실효성 강화

○ 지방재정의 분권 확대·강화

-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 배분 비율 축소-비수도권 비율 상향

-지자체의 재산세 결정 자율성의 점진적 확대

-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

-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19.24%에서 24.24%까지 인상

□ 이행 기간

○ 재임 기간 중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○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